

鄧小平 이후의 중국과 한반도

노재원 / 전 駐中 한국 대사

머리말

오늘날 중국의 사정과 한반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일 전에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대학에서 열린 학술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 오는 도중에 워싱턴과 뉴욕에서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질적으로 반공적인 성격의 정당인 공화당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부터입니다. 그 공화당 의회가 대만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 민주당 의원 가운데 人權과 民主化에 대해 감각이 특히 예민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의회 내에서 이 두 그룹이 결합되어 대중 정책을 주

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美 국무성 예산에 授權法이란 것이 있습니다. 수권법 안에 있는 정책 조항에서는 '티벳을 국제법 상의 독립 주권 국가로서 인정함과 동시에 티벳의 대표자로는 지금 인도로 망명한 다라이라마를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다라이라마에 대한 대사급의 대표를 보내도록 하라'는 식이며 이런 정책의 시행 결과를 6 개월 이내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클린턴 행정부는 이에 대해 만약에 그것이 법률로서 확정·통과된다면 자기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중국에 대해 그런 자극적인 법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감정적으로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美 국무성 다시 말해 美 행정부의 정책은 의회의 그런 공세적인 힘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수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미 행정부의 대외 정책 특히, 對아시아 정책은 상

* 이 글은 강연을 풀어 정리한 것임으로 표현에 구어체가 섞여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對아시아 정책을 말할 때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北核 문제에 대해서도 공화당 측은 굉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제 개인으로 봐서도 미국 정부가 지금 펴고 있는 정책이나 교섭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美 행정부가 對아시아 지역의 정책에 있어서 안팎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등소평 사후의 중국과 과제

먼저 鄧小平 이후의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 글도 쓴 일이 있습니다만, 중국의 등소평 이후 양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등소평이 죽은 후에 나타나는 과제인데 첫째, 가장 어려운 과제는 중국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 경제는 상당히 성장을 했습니다. 제조업 부문은 年 24%의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유통이나 에너지, 교통, 통신 부문은 2% 내외의 성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장에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굉장히 불균형이 있고 앞으로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후계자들이 풀어야 할 큰 과제라고 봅니다. 둘째, 중국도 경제에 관해서 지방 분권화가 심화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 조정 능력이

약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관리 능력이 과연 중앙정부에 있느냐, 아니면 중앙정부를 통솔하고 있는 후계자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한 가지 문제가 됩니다.

셋째, 부정과 부패의 추방입니다. 이 부정과 부패는 중국 체제와 그 사회에 있어서 체질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부정 부패 문제가 아니라 체제 가운데 깊숙히 뿌리 박혀 있는 것 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후계자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관심사입니다.

넷째, 작은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중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拜金主義 즉, 돈을 제일로 생각하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공산주의 이념에서는 굉장히 이단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민중의 의식이 공산주의의 이념을 이탈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회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며 또 이것 역시 후계자들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다시 돌아가 부정 부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江澤民 등의 上海派가 권력 투쟁의 방법으로 부정 부패를 추방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비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부정 부패의 추방은 중국 정권으로서는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비단 鄧小平 측근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택민 측근 아니 중국의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관련된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하지 않

고 등소평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한다면 이 것은 오히려 鄧小平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보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해서 등소평의 이미지를 추락시킨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이 죽기 전부터 시작함으로써 등소평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으며, 등소평 사후의 명예 유지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등소평이 다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강택민 일파가 권력 투쟁의 도구로써 부정 부패 척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부터 권력 투쟁이 거론되었습니다만 권력 투쟁의 여부에 대해서는 역시 있을 수 있다 고 봅니다. 그런데 권력 투쟁이 지금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중국 통치 상의 권력을 강택민 일파가 장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강택민 일파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강택민 일파들은 黨, 軍, 全人大, 그리고 政治協商委員會 등 네 가지 그룹에서 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택민이 새로운 후계 정권의 중추적 인물로 인정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권력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집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경우에 권력 투쟁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기 보호나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이지, 자기가 크게 되고 더 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내를 보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江澤民 외에 교석, 이서환, 군의 대표인 유하청같은 그룹들이 또한 있습니다. 또 재야에는 6·4 天安門 사태에서 쫓겨 나간 조자양이나 국가주석을 했다가 거세당한 양상곤같은 사람들이 과연 鄧小平 死後에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신문을 보실 때 유의할 것은 천안문 사태에 대한 재평가 문제가 나올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천안문 사태에 대한 재평가는 바로 조자양의 재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자양은 천안문 사태로 인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재평가를 하게 되면 그를 다시 복귀시키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상곤의 문제입니다. 양상곤도 정치적으로 뒤로 물러선 사람입니다만, 최근에는 廣東省과 관계가 깊습니다. 자주 왕래하고 있어 광동성이 하나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강택민은 잘 아시다시피 상해 사람이고 이상해 그룹이 현재 중앙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동성은 별로 나타나 있지 않았으나, 만약 상해 그룹이 北京을 점거했다고 한다면 그 때는 광동성 그룹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이 그룹이 정치적 반격의 큰 세력이 되어, 그 때 양상곤같은 사람을 등에 업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상곤은 원래 군 출신인데 장성급에서는 양상곤 그룹이 많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의 중급 장교 그룹에서는 양상곤 지지자들이 많다는 것이 앞으로 권력 투쟁이 일어날 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의 향배가 상당히 관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만, 군의 대표가 중국을 통치하는 권력자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권력 투쟁 속에서 자기들의 대표로서 적합한 사람이 있을 때 그에 대한 킹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군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권력 투쟁에서 조정과 킹 메이커의 역할을 군이 어떻게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鄧小平 死後의 후계 문제는 金日成의 사후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김일성은 공산당 조직 내의 당의 총서기와 정부의 국가 주석이라는 헌법상 혹은 党規上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후계자가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김정일이가 지금까지 1년이 다 됐는데 왜 당 총서기나 혹은 국가 주석 자리에 오르지 않느냐에 대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 등소평은 이미 그러한 자리에서 다 물려났습니다. 다만 1987년 11월 2일에 열린 党 제13기 제1차 중전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비밀 결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등소평 동지는 평생에 공산당의 결정을 초월하는 권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결의에 의해서 등소평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등소평이 죽으면 그 결의는 소멸됩니다.

그러면 등소평의 자리라는 것은 그가 죽으면 없어지고, 그 후에 남는 것은 정상적인 공산당식에 의한 통치 기구 다시 말해, 당과 국가라는 이중 체제입니다. 즉, 개인적인 이미지로서의 후계자는 없어지며, 현재 강택민 이하의 사람

들로서 구성된 후계 권력 집단에 의한 통치 체제만이 남게 됩니다.

■ 중국의 한반도 정책

이제부터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中華思想으로서 ‘이 세계는 중국이 중앙에 있고 그 외는 전부 다 야만족, 야만 국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新中華思想으로 표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상에서 중국은 이 세계에 서유럽 문명 체제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양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문명과 문화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세계가 있고 우리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인데 즉, 중국은 어떤 활동이나 사고 방식에 있어서 서유럽의 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말하는 소위 인권이나 민주화에 대해서 중국은 ‘그건 너희들의 개념이지 우리들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우리대로의 인권과 민주화의 개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혹자는 농담하기를 중국에도 민주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중국 통치를 지도하는 공산당의 입장에서 볼 때 ‘너희들 일반 대중은 民이고, 나 공산당은 主人이므로 그래서 민주주의다’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농담이 좀 섞인 것이지만, 중국은 유럽의 민주주의와 중국의 민주주의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공산 국가인 중국과 구소련을 비교해 볼 때도, 구소련이 어디까지나

유럽 문명 지향적인 반면에 중국은 유럽 문명하고는 항상 격리된 상태에서 동양 문화, 자기 전통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외교 기조의 변화입니다. 과거의 중국 외교는 구소련과의 대립 관계 속에서, 또 미국이나 여러 제국주의에 대한 조국 수호라는 의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교의 큰 방향은 親제3세계, 反제국주의, 反식민주의입니다. 최근, 등소평 이후에 중국의 무역은 GNP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0%, 16%입니다. 이것을 보면 중국의 대외 무역의 존도가 상당히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GNP의 10% 이상을 무역이 차지하면 대외 의존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36%, 60%는 분명히 대외 의존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국가와 경제 발전을 위해 歐美的 시장 진출과 자본 시장 참여, 또 구미의 기술 도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서방측과의 관계를 심화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의 기조를 변화시킨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기조가 있는데 그것은 중국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 정세가 안정되고 평화스러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국의 이 두 가지 기조 가운데에서 '주변 정세의 안정과 평화'가 한반도에 대한 중국 정책의 기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분명히 북한 일변도의 정책을 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와 수

교한 후, 중국의 정책 기조는 남한과 북한의 공존을 전제로 한 외교로 돌아섰습니다. 북한 일변도 정책에서는 남북한을 똑같이 인정하기 때문에 타 국가 사람들이 볼 때 중국은 남북한을 등거리로 보고 있다든지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이라든지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안보와 정치 문제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경제 문제에서는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첫번째는 한반도에서 平和와 安定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상 유지입니다. 이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두 정권이 서로 평화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평화이고, 두 정권이 평화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과 수교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韓·中 수교의 동기는 경제적 동기도 물론 있겠지만 정치적 동기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게 두 가지의 매우 섭섭한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북한과 사전에 아무런 연락없이 단독적으로 남한과 수교를 했는데, 이것은 북한으로 볼 때 중국이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었습니다. 둘째는 대한민국과의 수교 과정에서 중국은 교차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인데, 북한에 대해 對美 수교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된 일을 했다

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소련이 한국과 수교할 때 교차 승인을 하지 않은 전례가 있으니까 중국도 반드시 해야 할 도의적 의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과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교차 승인 문제를 제기하면 반드시 북한이 방해를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교 문제가 북한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너무 집요한 對南 접근의 반대 자세가 오히려 귀찮아서 북한과 상의없이 우리나라와 수교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너무 강한 입장 때문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 것입니다.

셋째, 상당히 재미있는 동기라고 보는데, 결국 중국은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 등 서방측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는 모스크바 카드, 모스크바에 대해서는 북경 카드를 써서 중국을 골탕 먹인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만일 북한이 미국이나 혹은 일본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심화해 나간다면, 반드시 중국에 대해서 워싱턴 카드를 쓸 것이라는 경계심이 있어 중국은 북한의 서방측 접근을 원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간에 대표부 설치 문제에 대한 협상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움직임을 중국은 반가운 마음으로 아니면 경계

심을 가지고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對북한 자세에 대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對한반도에 대한 또 하나의 큰 변수는 한반도의 非核化 問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중국이 너무 비협조적이다’ 또는 ‘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느냐’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애,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똑같이 아주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남북한 어느 쪽이든 간에 핵무기의 보유는 안 된다는 것을 누차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번에 李鵬 총리가 왔을 때도 그 점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나라와 북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됨을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지금은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중국으로서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북한이야말로 북경의 바로 코 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다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경고성이 아니라 상당히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그것을 막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의 對북한 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조치에 협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식 처방에 동조하면 미국의 추종자 밖에는 되지 않고, 또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북한이 중국을 미국과 똑같이 본다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우습게 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핵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행동 자체와 목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남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중국은 다른 관점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있어서 비핵화 문제는 중국과 미국이 똑같은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 하나는 과거처럼 6·25 전쟁 당시의 맷어진 血盟關係에 대해서 중국은 이미 졸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는 정상적인 국가 대국 관계를 염두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중국은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상당히 긴밀한 추종자 입장에서 행세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운 북한에 원유와 식량을 공급하는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매우 부족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북한이 붕괴되어 국가로서 소멸하는 사태가 생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중국은 이 사태에 대해서는 아마 매우 강력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 지도를 놓고 주변 국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 주변에 러시아, 몽고, 카자흐스탄, 타지크스탄, 아프카니스탄 등 14 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 14 개국이 모두 중국보다도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국가로서 소멸해버려 우리나라가 흡수 통일을 했다고 하면 바로 압록강 건너에 중국의 개인 소득 350 달러의 20여 배

인 개인 소득 1만 달러의 나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족이 200만 명이나 살고 있는 중국의 만주 지방과 동북부 지역은 중국의 중요한 곡창 지대면서 중공업 지대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안보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같은 완충 지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중국은 북한의 국가적 소멸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은 북한에게 중국의 추종자 역할을 기대하면서 미국과 같은 나라에 너무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한계선 가운데 적절한 선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으로서는 식량 혹은 원유를 공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데, 지금 중국은 1993년을 계기로 원유의 순수입국이 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93년 당시의 통계를 보면 중국이 678만 톤의 원유 순수입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해마다 100만 톤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해 왔습니다. 원유의 순수출국이었을 때는 팬찮았는데, 93년 이후는 사실상 白國도 수입하면서 100만 톤을 북한에 준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입장은 식량의 경우 중국도 부족 상태에 처하고 있는데 또 북한에 식량을 공급한다는 부담입니다. 이 두 가지 부담이 향후 중국의 對북한 정책, 그리고 對한반도 정책에 어떠한 변수로 나타날 것인지 두고 보아야 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국 경제의 특징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세부 사항에 들어가지 않고 큰 특징만을 말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등소평 등장 이후 중국은 국가적 지도 이념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앞에서는 외교의 기조가 변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국가적인 지도 이념도 동시에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공산 국가가 그렇습니다만,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 지도 이념의 변질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경제 이념이고, 레닌주의는 통치 이념입니다. 레닌주의를 간단히 말하면, 공산당에 의한 독점적 독재 정치입니다. 마르크주의는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가 장악하는 상태에서의 경제 정책인데, 등소평이 등장한 이후 실질적으로 보면 마르크스주의를 부인하는 조치였습니다. 개혁과 개방이라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라고 했습니다.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와 일반 시장 경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라는 최소한의 시장 경제 하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마르크스주의와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경제에 속하는 마르크스주의는 부인하고 레닌주의 즉, 공산당에 의한 통치를 아직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중국 통치 형태라고 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정치에 있어서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地方 分權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경제의 지방 분권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얘기를 안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소평이 1978년에 집권을 한 후 맨 처음 시도한 조치중에 하나가 人民公司의 철폐였습니다. 모택동 공산주의에 대한 정면 부인인데, 그것을 없앤 후에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고, 곡식의 얼마까지는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자유시장에 팔게 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농업이 갑작스럽게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12억의 농민들이 돼지 비곗살이라도 반찬으로 해서 밥을 먹게 된 것은 바로 등소평의 人民公司 해체와 농업 개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農業生產請負制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땅을 얼마나 줄 테니까 소득의 일부는 바치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마는 이와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에 위배되는 拜金主義 즉, 개인적 활동으로 개인 재산을 모은다는 소위 反혁명적이고, 反사회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장려한 것이 오늘날 중국의 큰 문제를 자아내고 있는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등소평이 취한 두번째 조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만, 財政請負制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稅制請負제라고도 하는데, 세금을 지방에서 걷고 이것을 중앙정부에 바치는 식입니다. 최근 2년전부터는 分稅制라는 것을 실시해서 국세하고 지방세를 나눠서 걷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다 걷을 수 없고 국세청 조직

이 전국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에 徵稅를 위탁했던 이 재정청부제의 현실적 필요성이 오늘날 중국 경제에 있어서 地方 分權을 장려하게 된 큰 원인이 된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이 재정력을 다 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중국의 경제와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우선 鄧小平 집권 이후의 그러한 두 가지 조치가 오늘날 경제 발전이라는 의미에서의 하나의 장점이 되었고, 그 후 사회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기타 국민들의 의식 구조 변화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도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잘못되면 중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위험론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일단은 서유럽 각국, 홍콩 언론, 그리고 일본 언론들이 보는 시각들은 제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선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중국 경제가 單一 國民 經濟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중국에는 맥주가 약 2,000 종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맥주는 크라운맥주, OB맥주 등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새 시판되는 맥주 가운데 '넥스'는 서울에서도 살 수 있고, 제주도의 서귀포 음식점에서도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단일 국민 경제 체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로 미국에서 베드와이저를 사고자 하면 뉴욕에서도 살 수 있지만, 하와이 와이키키 비치에서도 마실 수 있습니다. 단일 국민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렇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경제가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2,000 종의 맥주가 존재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중국은 자기들의 경제를 諸侯 경제라고 하는데, 그 지방의 제후들에게 경제력이 이미 분할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EU 경제와 같다고 본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국민 경제 등 여러 가지 국민 경제들이 집합해서 EU를 이루고 있듯이 중국 경제라는 것도 EU와 마찬가지로 그 밑에 廣東 경제, 福建 경제 등의 국민 경제들이 집합되어 하나의 중국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결론은 중국과 사업을 할 때 北京에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법률이 중앙에서와 같이 지방에 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치보다 인치여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문은 중앙정부가 상대적으로 관장하고 있지만, 많은 부문은 지방정부가 관장하는데 그것도 省정부가 아니라 市정부까지 내려가 독자적으로 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안에서 경제권과 사업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省

또는 어떤 市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현장에 가서 모든 상황을 조사해야지 北京의 도서관에 가서 법제 공부를 아무리 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 공장 운영이면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斷排水담당은 누구이며, 그 사람이 법대로 하고 있느냐, 전기도 갑자기 정전되는데 담당자가 정전을 시킴에 있어서 법적으로 하느냐의 여부를 파악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담뱃 값을 주면 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50년대와 60년대 초의 상황과 똑같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이 시기를 겪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나 미국 사람보다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사업은 비관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東北 3省, 山東省과 華南 지대의 廣東省이나 福建省을 비교해 볼 때 오히려 東北 3省 쪽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경제제도를 보면 福建省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개방적이어서 제조업을 하는 어떤 회사가 원자재를 들여올 때, 원자재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배에서 내리면 고대로 그 회사 창고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컨테이너를 푸는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하게 되는데, 물론 녹색신고제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福建省 당국이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행정이 매우 쉽게 이루어집니다.

중국의 어떤 지역은 아주 잘 발달된 세계 일

류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은 백 미터 지나갈 때마다 일일이 통과세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吉林省의 長春에서 물건을 싣고 大連까지 가는데 省의 경계를 지나갈 때마다 통과세를 내야 합니다. 통과세를 내라는 법률은 없습니다만, 그 곳을 경비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통과가 안되니까 이것이 바로 통과세가 되어 현실적인 또 하나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맷음말

앞에서 언급한 ‘되는 일도 없고 또 안되는 일도 없는’ 이 묘한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국 진출이 사실 일본보다 20년 정도 뒤졌습니다. 20년 정도 뒤진 것이 우리한테 불리한 것만은 아니고 20년간 일본이 진출해서 많은 고생을 통하여 이룩한 것을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빨리 배운다면 그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중국이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가적 시책으로 인식한 것은 최근 몇 년입니다. 이 몇 년의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들어가면 칙사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관습과 특이한 법 체제 그리고 ‘판시’라고 하는 대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빨리 숙지하여 알맞게 행동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사업상의 접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방 세계의 관행이나 사고 방식에 따라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